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11·12월호 특집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④

“Working together for a safer London” 영국 경찰

위원회 FOCUS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기고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꿈은 모두가 참여할 때 이루어집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스토킹 강력범죄 선제적 차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가 참여, 스톱 재범평가 프로그램』 개발(광주)

위원회 소식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경찰청 소식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전북 무주, 덕유산 눈꽃〉
경기도부청 안양민안서 신윤철 경감님 작

2022년 **11·12** 월

발행일 | 2023년 1월 11일

발행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2022년

11.12

월

C O N T E N T S

11·12월호 특집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④



“Working together for a safer London”

영국 경찰 1

위원회 FOCUS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9

위원장 기고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꿈은
모두가 참여할 때 이루어집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 13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스토킹 강력범죄 선제적 차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가 참여, 스톱 재범평가 프로그램』 개발(광주) 15

위원회 소식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18

경찰청 소식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19

해외 경찰제도 탐방 ④

“Working together for a safer London”

영국 경찰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

The police are the public, and the public are the police



고대 영국의 앵글로색슨족은 10가구씩 묶어 10호반을 이루고 10호반의 성인들이 돌아가며 공동으로 치안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중세를 거쳐 각종 범죄와 폭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근대 영국의 내무장관 로버트 필 경은 “과거 앵글로색슨족의 전통인 공동체 치안원칙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지역공동체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경찰 조직 구성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영국 의회가 1872년 「수도경찰청법」을 제정함에 따라 영국 최초의 근대 경찰 조직인 ‘런던수도경찰청’이 창설됩니다.

이렇듯 영국 경찰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로버트 필 경은 ‘근대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며 전 세계 경찰사에 빠질 수 없는 인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흔히 경찰을 부르는 애칭인 ‘바비’(bobby)와 ‘필러’(peeler)는 모두 로버트 필 경의 애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제시한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곧 경찰이다”라는 경찰원칙은 모든 경찰의 귀감이 되는 경찰활동의 원칙을 천명하며 경찰과 시민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전 세계 근대 경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경찰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개요



영국의 국토면적은 24만 3,610km²로, 인구는 약 6,750만명('22년 기준)입니다. 정치형태는 국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국가로서, 국왕은 의회소집, 의회 해산 선포 및 법률의 재가, 내각 임명, 조약 체결, 군대 통솔 등에 관한 형식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며, 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이원제로 구성되고, 총리는 일반적으로 하원 다수당의 당수가, 장관은 총리 추천을 받은 자가 국왕에 의해 임명됩니다.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이 있어 총리에 대한 신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네 개 지방으로 이루어진 준연방국가로 불립니다. 즉, 헌법에 따라 자치권을 보장하는 연방국가와 달리 각 지역에 대한 헌법적 주권을 영국의회가 보유하고 있어서 자치권을 이양한 형태인 것입니다(따라서 영국의회가 법률수정 또는 폐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자치지방정부를 해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 현황



분권에 있어 영국은 지방별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잉글랜드는 영국의회가 직접 관할하는 반면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는 각각 별도의 의회를 설치합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는 영국의회에서 제한을 유보하지 않는 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웨일즈의 경우 영국의회에서 열거적으로 유보한 범위 내에서만 자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현황(총 408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

잉글랜드	런던광역시	런던시티(City of London) + 33개 자치구(Boroughs)	단층제
	런던 외 도시 지역	36개 광역시(Metropolitan District) + 55개 자치시(Unitary)	
	런던 외 비도시지역	26개 도(County)-192개 자치구역(District)	다계층제*
	웨일즈	22개 자치시(Unitary Authority)	단층제
	스코틀랜드	32개 자치시(Unitary Authority)	
	북아일랜드	11개 자치시(Unitary Authority)	

* 1개 지역에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있는 단층제와 달리 1개 지역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단계별로 중첩되어 있는 구조를 의미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필수서비스 △보호서비스 △편의서비스 △시설서비스의 4가지로 구분되며, 경찰업무는 이 중 보호서비스에 포함됩니다.

국가경찰 조직

1

내무부

영국의 내무부장관은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찰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며, 그 산하에 △안보국 (Security) △범죄 및 경찰국(Crime and Policing) △범죄예방국(Safeguarding) △국경 및 이민국(Future Border and Immigration) △이민준수 및 법원국(Immigration Compliance and the Courts) 등을 두고 있습니다(그 외 30개의 하부조직 존재).

안보국	대테러 및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경제범죄, 소방, 자연재해, 왕실 및 VIP의 안전 등을 담당
범죄 및 경찰국	경찰, 범죄, 형사사법제도, 시민보호, 왕립경찰감사관실 및 소방과 안전서비스, 경찰기술, 경찰권, 얼굴인식, 주요사건, 축구 관련 경찰활동, 재범, 총기, 술과 마약 등을 담당
범죄예방국	인신매매, 가정폭력, 여성폭력, 범죄경력조회, 피해자보호, 아동성착취, 반사회적행동, 윤락행위, 스토킹 등을 담당
국경 및 이민국	국경문제, 비자시스템, 이민규정 및 법안 등을 담당
이민준수 및 법원국	송환, 구류, 외국인범죄, 불법이민전략, 망명, 불법야생동물 무역 등을 담당

또한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총 43개 지방경찰청을 설치 및 관리합니다.

※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지방경찰청은 각각 스코틀랜드 장관과 북아일랜드 장관이 담당하되, 해당 자치의회 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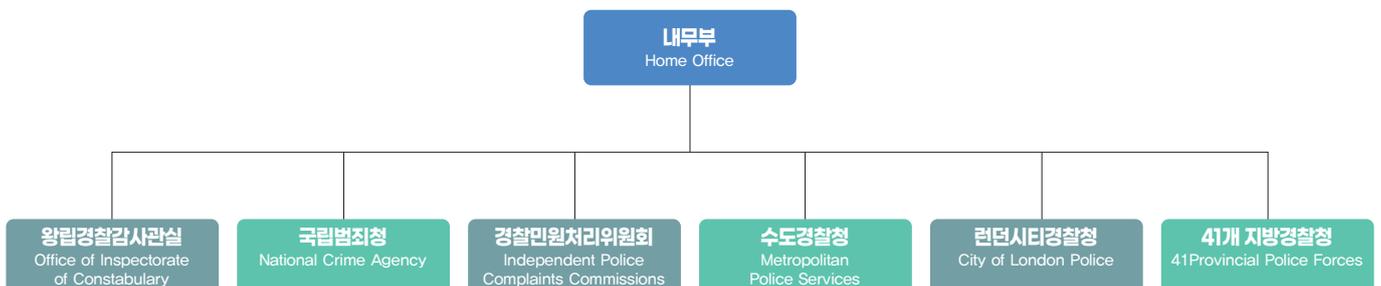
국립범죄청 (National Crime Agency, NCA)



국립범죄청은 영국 전역에 걸쳐 관할권이 있으며,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경찰과 다른 법 집행기관에 업무를 부과(Tasking)하고 이를 조정(Coordinating)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은 국립범죄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국립범죄청장은 내무부장관이 임명하되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정부와 반드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청장의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며, 본부를 포함하여 50개 지역기관과 40개의 해외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임무는 조직범죄, 국경관리, 경제범죄, 아동착취 등 국가적·국제적 문제를 담당하며, 「2017년 경찰활동 및 범죄법」에 따라 해상에 관한 법집행권한 (Maritime enforcement power)도 부여받아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영국의 국가경찰 조직도〉



자치경찰 조직

영국은 자치경찰에서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등 모든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경찰청의 경우 본래 국가경찰로 운영되다가 「1999년 런던광역시장부법」에 따라 2000년에 자치경찰로 전환되었습니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

1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의 경우 런던 2개청(수도경찰청, 런던시티경찰청), 잉글랜드 37개청, 웨일즈 4개청 등 총 43개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청이 많게는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관할*하며, 지역마다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지방경찰청에는 청장과 부청장, 그 직속으로 △지역담당국 △특수업무국 △기획국 △인사교육국 등을 두고, 지방경찰청 산하에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을 하나의 지방경찰청이 관할하는 형태

수도경찰청 Metropolitan Police Services

▶ 런던광역시의 33개 자치구 중 런던시티 자치구 1개를 제외한 32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경찰청

▶ 관할을 북부, 중부, 동부, 남부의 4개 광역지역으로 분리하고 각 지역 경찰책임자로 부국장을 두며, 다시 그 밑에 각 2명의 경무관을 둬, 각 광역지역을 8개 내지 11개의 구로 나누는데, 구에는 경찰서를 두되 지역이 넓고 치안수요가 많은 구는 수개의 분구로 나누고 분구에 광역파출소를 설치

런던시티경찰청 City of London Police

▶ 런던시티경찰청의 관할구역은 면적 2.9km², 상주인구 1만여명에 불과하나 영국은행, 증권거래소 등 런던의 경제중심지로서 통근자가 30만명, 관광객은 연간 4백만명에 이르고 있음

지방경찰청장(Chief Constable)은 관할 지방경찰청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감독권, 부청장 이외의 모든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 일상적인 예산운용권을 지니며,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는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잉글랜드·웨일즈)지방경찰청장의 임명

▶ **통상** 지역치안위원장(PCC)이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임명과 해임권을 행사

- 지역치안평의회(PCP)는 지역치안위원장의 지방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자격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지역치안평의회 위원 중 2/3가 찬성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 임명 등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

※ 지방경찰청장은 현재 또는 과거에 경찰관이었던 사람 중에서 선정해야 함

▶ **수도경찰청장** 내무부장관이 추천하고 국왕이 임명

※ 수도이자 국제적 도시인 런던의 위상을 고려한 결과

▶ **런던시티경찰청장** 수도경찰청과 마찬가지로 내무부장관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

((잉글랜드·웨일즈)치안보조관(Police Community Support Officer, PCSO))

▶ 정규경찰이 아니며 제한된 권한으로 주로 지역사회순찰업무를 담당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 도입되었으며, 내무부 경찰보조금으로 치안보조관의 자금지원 총당

2 지역치안위원장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PCC)

지역치안위원장 제도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경찰청 43개 중 40개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지역치안위원장이 없는 경찰청은 이하의 총 3곳
 - 수도경찰청 선출직인 런던광역시장(치안정책실)이 지역치안위원장 역할을 수행
 - 런던시티경찰청 런던시티의회 경찰위원회가 지역치안위원장 역할을 수행
 - 그레이터 맨체스터경찰청 시장이 지역치안위원장 역할을 수행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 예산·재정총괄권을 보유하며, 지역치안의 전략적 계획에 대한 우선사항을 결정합니다(다양한 행정적 권한을 통해 경찰을 통제).

※ 경찰이 처리하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지역치안위원장이 지휘할 수 없으며, 지방경찰청장만 지휘권 행사 가능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같이 4년마다 지역시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1회에 한해 재선이 가능합니다.

3 지역치안평의회 (Police and Crime Panel, PCP)

지역치안위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로 10명~18명의 지명된 지방의회의원과 2명의 독립위원(시민 자격으로 선임)으로 구성됩니다.

평의회는 지방경찰의 예산 지출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하며, 평의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예산안이나 지원보조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치안위원장이 작성하는 지역치안계획을 검토하여 치안 현안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고, 지역치안위원장을 청문회에 불러 치안 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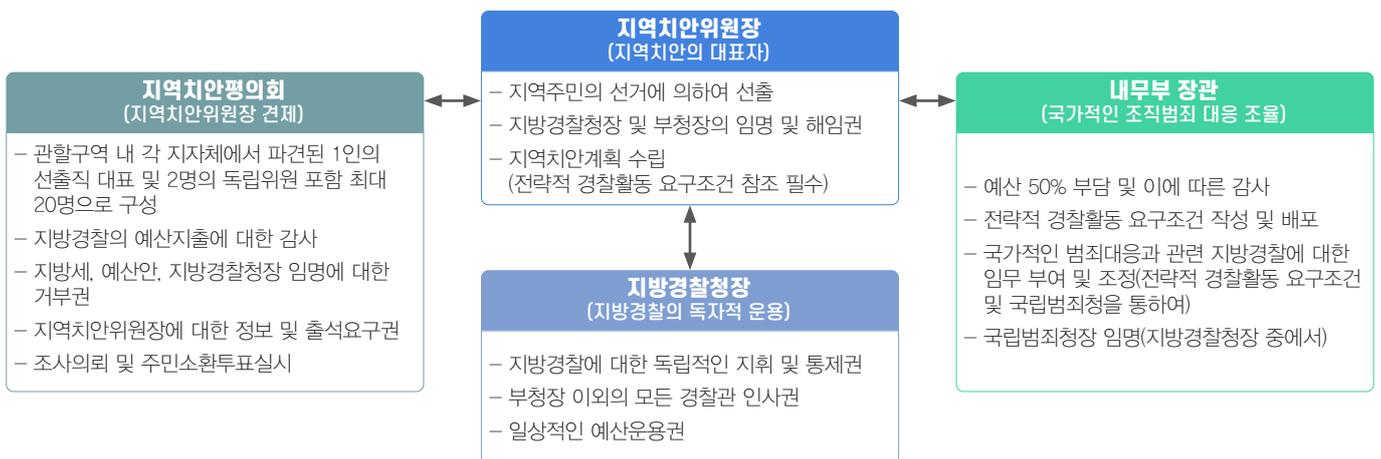
4 내무부장관



내무부장관은 조직범죄, 테러, 국경범죄와 관련된 국가적 위협이나 지역적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 방향을 작성하며, 지방경찰 및 범죄 대응 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전략적 경찰활동 요구조건'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국립범죄청을 통하여 지방경찰에 업무를 부과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잉글랜드·웨일즈의 지방경찰 4원체제〉



1

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은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 각 1개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청장, 부청장 외 3명의 국장이 있으며, 각 국장들은 스코틀랜드 지방을 3개의 지역(North, East, West)으로 나누어 관할합니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청장, 부청장 외 4명의 국장이 있는데, 각 국장들은 △범죄운영국(Crime operation) △통합지휘국(District policing command) △운영지원국(Operational support) △지역사회안전국(Community safety)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잉글랜드, 웨일즈와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장(Chief Constable)이 관할 지방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지휘감독권, 부청장 이외의 모든 경찰관에 대한 인사권, 일상적인 예산운용권을 지니며,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는 해당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지방경찰청장의 임명

- ▶ 자치의회 경찰위원회*가 지방경찰청장을 임명

* (스코틀랜드) Scottish Police Authority /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Policing Board

((스코틀랜드)지역사회 치안관리관(Community Warden, CW))

- ▶ 정규경찰이 아니나 '확장된 개념의 치안유지 가족(Extended policing family)'으로 도입
- ▶ 지역사회 안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위험도가 높은 범죄 및 반사회적 행위가 많은 지역에서 업무수행을 하며, 지역사회의 조정자(Mediator), 협상가(Community negotiator) 역할 수행
- ▶ 잉글랜드·웨일즈의 치안보조관(PCSO)의 경우 지방경찰이 채용·교육·보수지급을 담당하는 반면, 스코틀랜드의 지역사회 치안관리관(CW)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

2

자치의회 경찰위원회

자치의회 경찰위원회는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며, 그 외 경찰활동에 관한 재정배분권,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공무원 및 행정인력 임용권, 경찰활동 전략계획 수립 및 집행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자치경찰 예산



지방경찰의 예산은 경찰기금이라는 독립된 재원으로 운영되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Grant)과 지방경찰청이 설치된 지역의 지방세에서 지원되는 지원보조금(Precept)으로 구성됩니다.

※ 경찰기금의 구성은 '02년까지 중앙정부 보조금 50%,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5%, 기타 기부금 및 수입 25%로 편성되다가 '03년부터는 기타 수입은 거의 없고 중앙정부 보조금 75%,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5%로 편성되고 있음

〈영국 지방경찰 자원〉

구분	주체	재정종류	비고
중앙	내무부	경찰보조금 (Police Grant)	
		특정보조금 (Specific Grant)	
	주택·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	세입지원교부금 (Revenue Support Grant)	잉글랜드지역만
		기업레이트 (Business Rates)	
	웨일즈의회정부	세입지원교부금 (Revenue Support Grant)	웨일즈 지역만
		기업레이트 (Business Rates)	
지방		지원보조금 (Precept)	
		기타수입 (경찰 자체사업이나 투자)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주체는 내무부*와 '주택·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로 구분되며, 이때 '주택·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잉글랜드 지방경찰에 한해 지원됩니다. 다만 웨일즈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보조금을 웨일즈 의회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무부장관은 지방경찰청 예산에 필요한 자금을 51% 이상 지급할 권한을 갖는데, 이는 행정업무규칙 제정권과 더불어 경찰을 통제하는 두 가지 핵심권한으로 꼽힘

내무부의 보조금은 경찰보조금(Police Grant)과 특별한 행사나 목적 등이 있을 때 지급되는 특정보조금(Specific Grant)으로 구성되며, '주택·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의 보조금은 세입지원교부금(Revenue Support Grant : 보통교부세)과 기업 레이트(Business Rates : 비주거용 재산세)로 총당합니다.

긴급신고시 대응체계



긴급신고는 단일번호인 999 운영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신고자가 999로 긴급신고 전화를 하면 통신회사 소속의 교환지원센터에서 신고자 요청에 따라 긴급신고를 경찰·소방·구급대·해안경비대 각 대응기관의 긴급통제센터로 연결해 주며, 기관 대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가장 필요한 긴급대응기관에 우선 연결하고, 동시에 다른 긴급대응기관에도 관련 사항을 통보합니다.

만일 경찰·소방·구급대·해안경비대 중 대응기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경찰의 긴급통제센터로 연결합니다.

지방경찰 간 협력

지방경찰 간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상호응원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잉글랜드, 웨일즈의 지역치안위원장협회나 전국경찰청장협회를 통한 협력·조정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본 코너의 사진은 모두 영국(런던) 경찰청 공식 SNS에 등재된 사진임을 밝힙니다. 〉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보다 안전한 전라북도,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도약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21. 6. 30. “더 행복한 삶, 함께 지켜요!” 라는 슬로건과 함께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전북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치안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등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보다 안전한 전라북도,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행안부 주관) 전국 1위 선정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Control Tower) 중심
범죄예방 관련 협업체계 구축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그간 각 부처·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을 추진해 왔으나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의 범죄현황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 없이 일회성, 인기 위주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만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전북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도, 도경찰청, 도교육청, 각 시·군이 함께 범죄예방 관련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치안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을 구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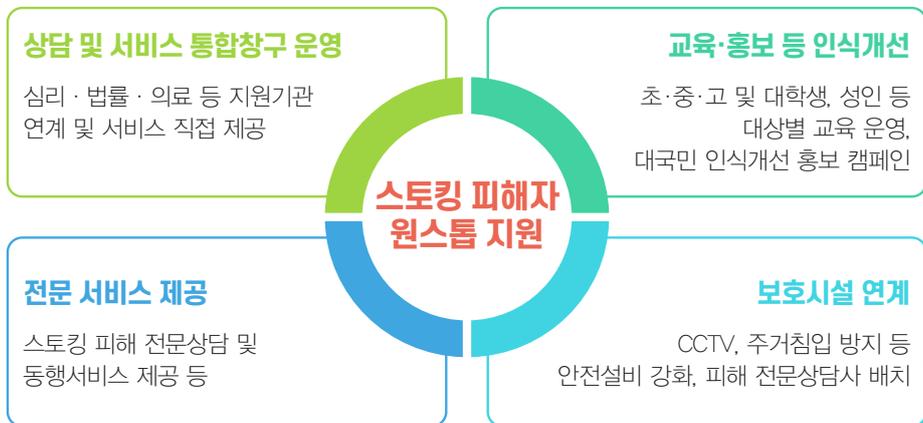
향후 전북에서는 舊도심지 내 △보안등 조도 개선 △방법시설 설치 등 지구단위 집중개선을 추진하고, CPTED 사업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분야까지 확대하여 종합적 주민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112신고 및 상담전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은 도와 도경찰청의 협업하에 피해자 보호 전문기관인 1366전북센터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피해자가 △법률·의료 상담 △임시보호시설 등을 한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또한 피해자가 직접 집 안팎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등 안심 장비를 지원(예산 6천2백만원) 하며, 재피해우려가 높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과 상담기관이 사후 모니터링 등 공동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점에서 치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다! MZ세대 소통창구 「메신저-폴」 운영



전북은 도내 경찰행정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 청년정책자문단 ‘메신저-폴’^(6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메신저-폴은 지난 4월 메타버스(가상공간)상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6월경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에 열린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정책제언 경진대회에서는 청년층이 바라보는 지역 내 치안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경진대회는 △범죄예방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진행되었는데,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20대가 애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 관리 방안’과 ‘원룸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 등의 정책이 제안되었습니다.

선정된 우수제안은 실무부서의 정책검토를 거쳐 치안정책 수립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홍보 및 개선사업 추진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 도경찰청 합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공익광고를 제작, 지상파 방송사(KBS,MBC)를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어린이 보행안전이 열악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노란색 노면 표시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펜스·시선유도봉 설치 등 통학로 개선사업(예산 1억5천만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행공간과 차량 통행공간을 시각적·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도내 통학로에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이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홍보부스 운영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을 맞아 치러진 도내 행사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대상 올바른 훈육 방법 교육 및 상담 등을 비롯,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KCSI 차량 활용 지문사전등록 및 지문 채취체험 △경찰제복 및 외근 장비체험 △경찰특공대 및 사이카 차량 탑승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부터! 「심폐소생술 실습 및 교육」 실시



이형규 위원장을 비롯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들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 및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의 중요성 △응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처 요령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외상환자 응급처치 △하임리히법 등 현장 경찰관들에게 필수적인 내용들을 함께 숙지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하였습니다.

경찰의 77번째 생일, 표창 수여 및 소통 간담회 등 현장 방문



77번째 ‘경찰의 날’을 맞아 이형규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의 발걸음은 정읍 상동지구대와 전주 삼천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이날 방문에서는 그간 주민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전달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은 향후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태원 사고 이후
튼튼하고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꿈은 모두가 참여할 때 이루어집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이형규 위원장

지난해 7월에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이후 주민자치의 완결판으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도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2년차를 맞는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더 안전하고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CPTED)은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 범죄예방 등 생활안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치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최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 공모 사업에 당당히 '전국 1위'로 선정,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전북 범죄환경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셉테드(CPTED)는 미국의 도시학자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1961년 발간한 저서 '미국 대도시의 삶과 죽음'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 해법으로 환경개선을 제안한 것이 시초입니다. 범죄자들이 싫어하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기법으로 미국 등 많은 국가는 이미 이를 통해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뉴욕입니다. 시민들의 눈에는 매우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뉴욕 지하철과 거리의 담벼락 낙서를 지우는 변화를 통해 199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뉴욕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으며, 그 결과 이제 뉴욕은 '안전한 도시'로 글로벌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계획에 주민과 함께 하는 셉테드(CPTED) 개념을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는 2014년 블라시오 뉴욕시장의 MAP 계획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시장의 행동 계획'(Mayor's Action Plan for Neighborhood Safety)인 MAP는 15개 주택개발지구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1억 4천만 달러(한화 1,920억원)를 투입한 지역주민 맞춤형 셉테드(CPTED)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치안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보안등 △CCTV △스마트 도어 등 주민이 원하는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흉악범죄를 58%까지 줄이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셉테드(CPTED)가 소개되었지만 실제 범죄예방 정책에 반영된 것은 경찰청 주도로 판교, 부천에 시범 사업을 한 2005년부터이며, 방법용 CCTV와 가로등 조도 개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안전'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안심마을·거리 만들기' 등의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셉테드(CPTED)가 범죄예방에 유효한 것으로 인식된 이후 진행



중인 많은 셉테드(CPTED) 사업은 그간 경찰·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의 보안시설 설치라는 물리적 환경개선에만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셉테드(CPTED)는 앞서 뉴욕 사례에서 보았듯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소해 보이는 환경개선으로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미국 뉴욕 사례와 같은 주민이 원하고 지역에 맞는 셉테드(CPTED)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주민은 물론이고 범죄예방과 디자인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경찰관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도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더 행복한 街, One-Stop CPTED+>와 야간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등 2건의 셉테드(CPTE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일방적

틀에서 벗어나 주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범죄예방 주체 모두가 참여하고 지속적인 협업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복형 셉테드(CPTED)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더 튼튼하고 촘촘한 생활 안전망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민을 포함한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할 때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의 성공 조건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입니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여 자치경찰 치안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을 줄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범죄예방 주체(경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간 체계적인 협업을 주도하여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을 총망라한 모델하우스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라북도, 더 행복한 도민'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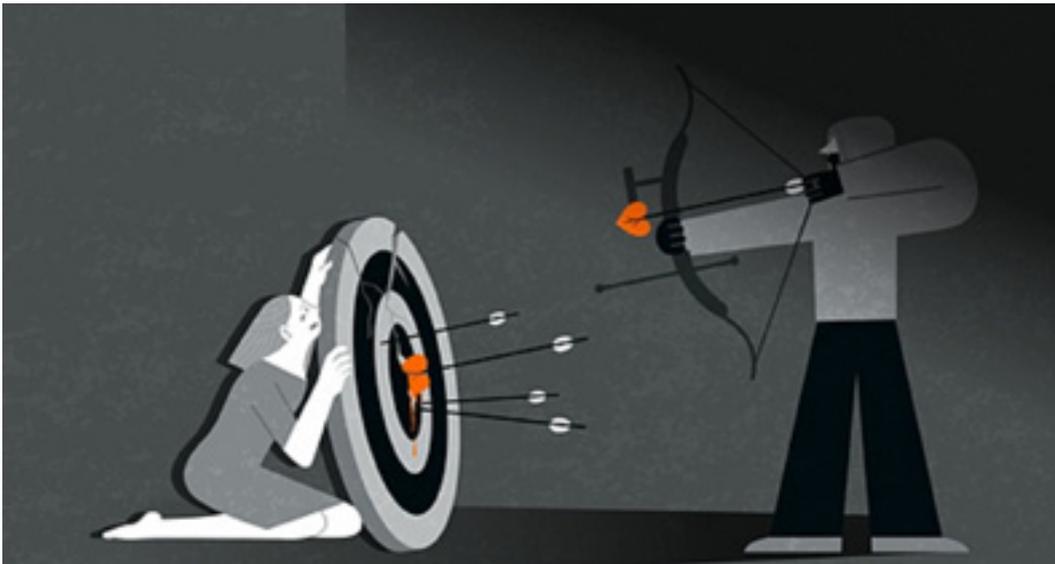
이형규 위원장 약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박사
 행정고시 16회 합격
 전라북도 행정·정무부지사
 現 전북도자치경찰위원장



스토킹 강력범죄 선제적 차단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가 참여, 스토킹 재범평가 프로그램』 개발(광주)

추진 계기



스토킹 신고 접수현황(*22.1~10월)

전국	광주 지역
24,396 건 (일평균 66.8건)	519 건 (일평균 1.4건)
전년 대비 198.7% 증가	전년 대비 16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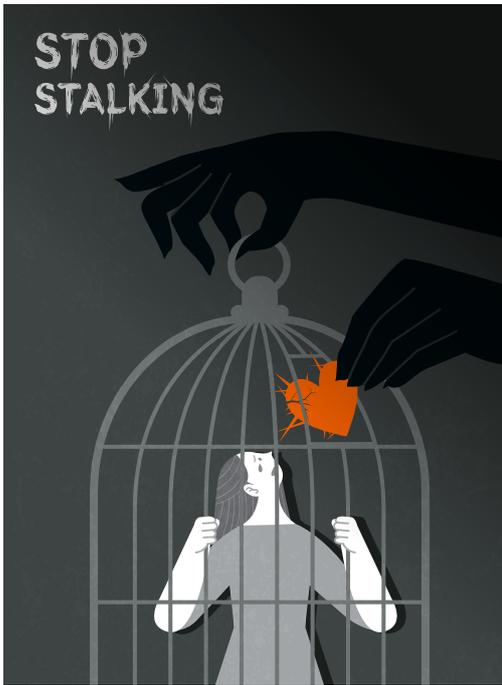
「스토킹 처벌법」 시행(*21. 10. 21.)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경찰청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제도 정착에 힘써 왔습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스토킹 신고(*22. 1~10월)는 전년 대비 198.7%가 증가했고, 광주 지역의 경우 전년 대비 161%가 증가하는 등 법 시행 이후에도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2년 9월 서울시 신당역에서 역무원이 직장동료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에 대한 사회불안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여 강력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와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은 가해자의 재범억제 및 교정 없이 피해자 보호 대책만으로는 스토킹 강력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 재범 평가'를 통해 선제적으로 강력범죄를 차단하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

무엇이 필요한가?



스토킹 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재발 위험이 높지만 정작 수사단계에서는 재범위험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위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가 있기는 하나, 이는 말 그대로 긴급응급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어서 그보다 범위가 넓거나 성격이 다른 잠정조치 또는 기소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활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였습니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스토킹 등 범죄 재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자료(경찰청)

누구와 협력하였나?

스토킹 피해의 다각적인 보호·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스토킹 피해 지원 자문단 'Together'를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치안정책 및 아이디어를 논의한 끝에 광주 스마일센터*가 제안한 「스토킹 재범평가 프로그램」 시책을 발굴하게 됩니다.

*스마일센터 : 강력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하기 위해 법무부가 위탁 운영하는 범죄피해 통합지원기관

정책 고도화를 위한 노력

보다 더 실효적인 정책 설계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미국의 '치명적 잠재범죄 위험평가 벤치 가이드' 등의 가해자 재범평가 관련 해외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美 치명적 잠재범죄의 위험평가 벤치 가이드

- 파트너 폭력의 살인 위험 증가 관련성을 14개 문항으로 평가한 체크리스트
- 평가보고서는 미국 버지니아 법원에서 판단자료로 활용
- ▲목조름(choking) ▲치명적 무기사용 ▲자살시도 항목은 살해 및 치사율과 상관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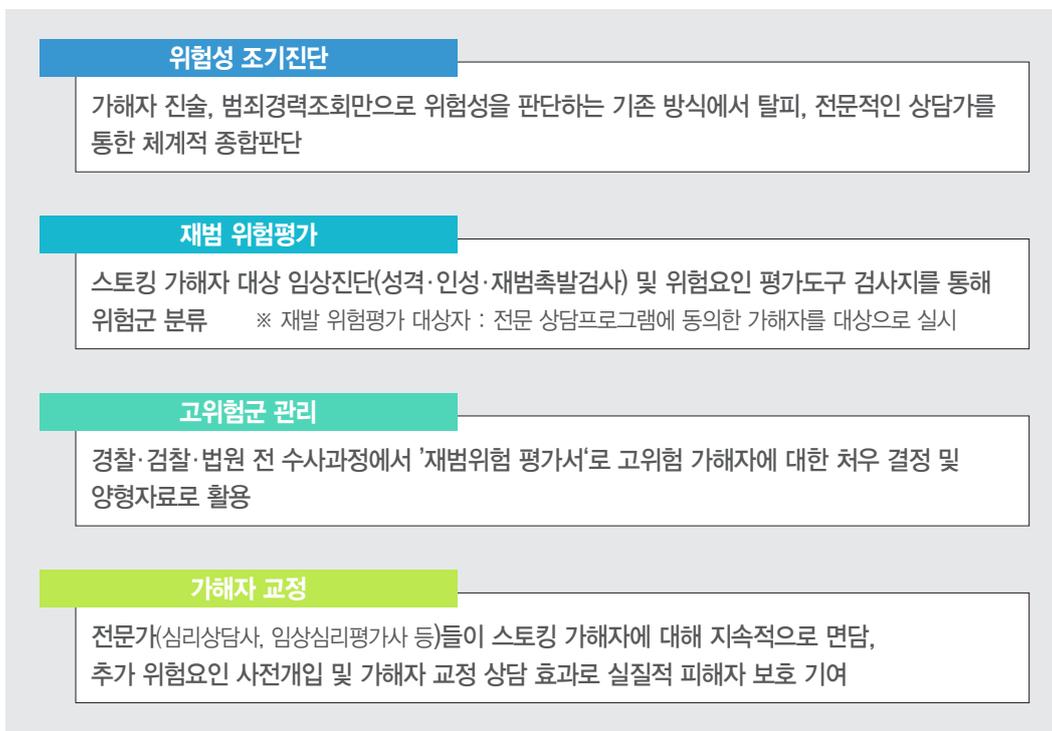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였나?

「스토킹 재범평가 프로그램」은 행안부 주관 “지역 치안·생활안전수요 대응 주민생활 안정 시책” 공모·지원사업에 제출, '22. 12. 14. 선정됨으로써 예산(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



전문가들은 스토킹 가해자 면담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로써 도출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보고서는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소명자료로 제출되는 등 가해자의 성행(性行)을 개선하기 위해 폭넓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전문가 참여, 스토킹 재범평가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강력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지역 치안 만족도 향상을 통한 안전한 광주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 현장에서 지금

경북 찾아가는 경북자치경찰 홍보 및 공감을 위한 '토크 콘서트' 개최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대구·경북권 주요 대학교를 방문하여 경북자치경찰을 홍보하고 대학생들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치안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경북자치경찰을 지속 홍보하는 가운데 지역 치안 문제 해결에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감 토크 콘서트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종 세종형 자치경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자치경찰제 시행 2년 차를 맞은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 총 90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골목길 CCTV 비상벨과 연계해 동선을 관찰하는 '나좁볼터' 등을 비롯하여 우수상에 2건, 장려상에 6건 등 총 8건의 제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한 제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후 세종형 자치경찰 정책 수립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남 자치경찰-마을공동체 간 협업 워크숍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계자를 포함한 마을공동체 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마을공동체 협업 워크숍'(22. 12. 8.)을 개최하였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와 함께 마을공동체에서 추진 중인 중인 치안활동 사례를 소개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치안활동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을 확대하기 위해 '23년도부터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노력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자치경찰분과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 실천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22. 11. 21.)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자치경찰담당관(여개명 총경)이 참석하여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 관리기능 변경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인력확보 방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경찰청 입장을 설명하였고,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관련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과학치안 발전포럼 참석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과학치안 발전포럼'은 과학치안 발전을 목표로 과학기술 기반 대국민 치안서비스 고도화 및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협력의 장입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 및 치안분야 관계자들이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가운데, '지역 맞춤형 안전망 구축과 자치경찰 중심의 과학치안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및 치안분야 전문가별 주요 발표 주제

발표자	발표 주제
한양대학교 전영수 교수	미래사회 지역 불균형 해소와 주민 안전을 위한 정책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원장	지역 주도형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질 개선 방향
경찰청 이동규 자치경찰기획계장	자치경찰제 시행과 과학치안의 필요성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자치경찰의 활동과 사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 대상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경무관 김성희)은 '22. 12. 8.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파견 총경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파견경찰관 파견기간 연장 논의 경과 △다중운집 행사 관련 보고체계 및 시도 협력 강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하고,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북 전주, 눈 쌓인 한옥마을〉 전북청 임실서 이귀재 경감님 작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기고문 안내

자격 자치경찰에 관심 있는 누구나

내용 자치경찰 관련 무엇이든

제출 방법 소속·성명 기재, 별도 양식 없이 작성하여 메일(thingshyun@police.go.kr) 제출

※ 문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경위 김범수(02-3150-3984 / 경비 8-3984)

제출 기한·분량 수시 제출, A4 2장 이내(사진 등 첨부 가능)

※ 매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다음 월호에 게재됩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 2022년 11·12월

자치경찰 소식

A U T O N O M O U S P O L I C E N E W S

발행일 2023년 1월 11일 No. 14

발행인 김성희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편집자 전창훈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

임윤상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김범수 경찰청 자치경찰협력담당관실

'자치경찰 소식지'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각종 정책 수립·추진 사항 등을 안내·공유하기 위해 매월 온라인(PDF) 형태로 발간, 전국 경찰관 및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국가기관, 지자체, 대학, 학회·연구원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